

4차 접종 50대 이상 확대 첫날...백신 회의론 속 ‘썰렁’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4차 접종 가능
 백신 회의론 여전...“변이 바이러스 효과 의문”
 전문가도 의견 분분...“자율 접종해야” 의견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배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부터 50대도 4차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4차 백신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돌파 감염이 많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됐다. 그동안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였다.

정부는 대상자들의 4차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299명으로 12주만에 월요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더블링 현상이 2주 넘게 이어지자 4차 백신 접

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르는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참모진들의 4차 접종 사실을 공개하며 “백신을 접종하면 돌파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접종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50대들도 백신이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한다며 백신을 맞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커뮤니티 등에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백신 회의론’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여전히 4차 접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부 고모(55)씨는 “혹시 몰라서 3차까지 백신을 맞긴 했지만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는데 별탈 없이 완치된 지인을 보면서 4차 백신은 맞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57)씨는 “1년에 백신을 4차례

맞으면 그나마 있던 면역력도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올해 하반기에 개량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기보다 부작용들에 대해서 보완이 이뤄진 백신을 맞고 싶다”고 했다.

더 이상 백신을 맞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서초구 주민 이모(62)씨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 바이러스는 과거에 개발된 백신 면역을 회피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굳이 4차까지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4차 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선적으로 코로나 4차 접종 대상자가 됐던 60대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률은 32.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4차 백신이 접종 완료자 및 확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있다.

김택 순천향대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차 백신은 3차 접종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뜻이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오해”라며 “중증 예방효과가 50~70%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 12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 유지되는 등 예방 접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대는 인지되지 않은 기저질환이 있을 연령대인 만큼 질병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서 4차 접종을 권장한다는 질병청의 권고도 확률적으로 보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차 이상 접종 후 감염되거나 3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장기간 면역을 유지된다”며 “백신 부작용 사례도 있는 만큼 강력 권고보다는 자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복지 강화’ 전남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전남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

지원 범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1만5000가구 혜택
 가구별 지원금액 평균 7만2150원 인상...실질적인 도움 기대

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전남지역 3만68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1만5000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로 평균 7만

2150원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3만7200원, 2인 18만9500원, 3인 25만8900원, 4인 이상은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같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상장사,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 전국 최고

민주 이정문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입수
 15개사 평균 영업이익률 0.7% 전국 꼴찌

광주지역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코넥스) 15개사의 부채비율은 131.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상장사들의 평균 부채비율 70.7%의 1.9배 수준으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이고 전라·제주권을 포함한 5개 도 중에서도 가장 높다.

7대 도시 가운데 광주에 이어 인천 86.2%, 대구 81.7%, 서울 77.3%, 울산 70.8%, 부산 66.8%, 대전 5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입금 의존도도 광주가 29.5%로, 역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 비율은 전국 평균 20.5%를 크게 웃돌고, 차입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울산(14.3%)보다 2배 높다.

대출금리 상승세 속에 9월 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조치 종료가 예고돼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광주 상장법인 15개사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0.7%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8.4%)의 12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며, 전국 최고 대전(14.0%)보다 13.3%포인트나 낮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광주 상장기업 15개사 가운데 2곳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3개년 연속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으로 산정한다.

오유나기자

2022~2023 문화관광 지정축제

제15회 정남진 강릉 모듬축제

7.30(토) ~ 8.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